권두언

21세기 의료보험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

宋 梓
현 명지대학교 총장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 단장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1977년 도입되어 1989년 전국민으로 확대됨으로써 전국민 의료보장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병원문턱이 낮아지고, 국민 누구나 큰 경제적 어려움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금년 10월 이전의 의료보험체제는 다수의 직장조합과 시·군·구 지역조합으로 분립·운영되었고, '저부담·저급여'구조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계속되어 적지 않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봉급생활자와 자영자간의 보험료 부과기준 차이로 계층간·지역간 부담의 형평성 결여, 조합간 구조적 재정불균형의 심화에 따른 급여수준의 하향 평준화, 다수 조합운영으로 인한 관리체계의 비효율, 그리고 불합리한 보험수가구조에 의한 의료공급체계의 비효율 등의 과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다.

이러한 의료보험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료보험통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일부 학계의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21세기에는 제도운영 환경이 고객(Customer), 경쟁(Competition), 변화(Change) 등 3C가 요구되므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의료보험제도의 기본틀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점증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올해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이러한 주장과 제도 개혁의 당위성을 받아들여 의료보

의료보험의 통합은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적정하게 부담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연대성을 강화한다는 기본철학에 기초하여 설계되었다.

험통합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3일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이 구성되었으며, 기획단에서는 통합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하여, 현행 의료보험제도상 내재하고 있는 구조적 취약점을 개혁함으로써 제2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의료보험의 통합은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적정하게 부담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연대성을 강화한다는 기본철학에 기초하여 설계되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급여범위의 포괄성 보장이다.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재활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둘째,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보장이다. 봉급생활자와 자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소득비례 단일부과체계를 개발하여 계층간·지역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영자 소득을 파악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셋째, 제도운영의 효율성 확보이다. 조직기구의 경량화, 정보공유시스템화, 진료비청구·심사업무의 효율화 등으로 작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보험가입자, 보험자, 의료공급자 및 정부의 참여에 의한 4자간의 적극적인 협조와 긴밀한 협력관계에 바탕을 둔 민주적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넷째,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다. 보험수가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진료비의 심사기능을 독립시켜 의료의 질평가 기능까지 포함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진료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자원절약적인 진료비 지불방식의 개선으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한다.

끝으로 통합재정의 건전성 확보이다. 재정통합에 의한 적정보험료·적정급여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이를 위해서 보험급여 확대 및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상응한 보험료 인상, 관리운영비 절감, 의료공급체계의 거품·왜곡·비효율의 최소화 등을 통한 안정된 재정운영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금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면, 2000년 1월부터 현행 의료보험은 새로운 건강보험으로 크게 변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통합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예방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우리 모두는 이해 당사자간의 집단이기주의적 사고틀 속에서 깨어나 서로 협력하여 '공동선'을 이룩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며,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길만이 우리의 선택이다.